
2025년 ESG 평가 영역별 주요 이슈 분석

2025. 11.

|| 목 차 ||

I. 환경	2
II. 사회	10
III. 지배구조	14
IV. 금융사 지배구조	18

- ❖ 국내 상장사*의 최근 3개년(2022~2024)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공개율은 25%(251사/1,023사)이며, 공시 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대규모 상장사일수록 사용량 산정 및 환경정보 공개 역량이 우수함
- ❖ 2024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은 166,584TJ로 전년(137,032TJ) 대비 22% 증가했으며, 특히 운수(406%), 철강/비철(193%) 업종의 비약적인 증가세는 EU CBAM¹⁾ 등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글로벌 규제 강화로 인해 공급망 내 탈탄소 압박이 심화된 결과로 분석됨
- ❖ 2024년 총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은 5.7%로 전년(4.8%) 대비 상승,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제도적 한계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전환 속도는 더디나, 수출 비중이 높거나 전력 집약적 산업일수록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확산하는 추세임
- ❖ 주요 조달 수단은 태양광 등 자가발전(43%)이며, RE100**** 이니셔티브 가입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²⁾(14.8%)은 미가입 기업(2.9%) 대비 5배 이상 높음
- ❖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산업군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2025년 한국ESG기준원 환경평가 대상 기업으로, 유가증권 상장사 전체 및 코스닥 상장사 일부 기준

**원칙은 기업이 공개한 국내, 별도 회계기준의 실적만 집계(단, 해외 또는 연결 회계기준 실적만 공개 시 예외 반영)

***기업이 한 해 동안 사용한 총에너지 사용량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과 비재생에너지 사용량의 합계로 정의

****생산과정에서의 사용 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1. 검토 배경

- 2025년 10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기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함
 - 현재 누적 34GW(기가와트)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까지 대폭 확대하고, 탄소중립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제정과 녹색금융 확대를 선포³⁾한 만큼 국내 신·재생에너지 조달 환경의 개선이 기대됨
 - 특히 기존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던 △장기 PPA⁴⁾/VPPA⁵⁾ 제도 정비 및

1)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고탄소 제품의 EU 수출 시 탄소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2) 2024년 기준

3)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식 출범사, 2025.10.26

4)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발전사업자로부터 일정 기간 직접 구매하는 전력거래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5) 실제 전력은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망을 통해 공급받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분만큼 인증서(REC)를 거래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확보하는 가상 전력구매계약(Virtual Power Purchase Agreement)

망 이용료 지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과 함께 분산형 설비(ESS)⁶⁾, 지붕형 태양광 등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정책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조달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자본비용 절감, 공급망 리스크 대응, 시장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음
 - 2026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⁷⁾가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고탄소 제품의 EU 수출 시 탄소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최근 주요 기업(애플, 삼성전자 등)은 협력사에게 재생 전력 사용 확대와 관련 성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조달 역량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됨

2. 평가 개요

- (평가 항목 및 이력) 한국ESG기준원 환경평가는 2022년부터 △최근 3개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공개 여부와, △전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실적의 개선 여부, △관련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려운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2024년까지 관련 문항을 시범적용⁸⁾ 평가하였으나, 국가 정책⁹⁾과 정합성을 위해 2025년부터 시범적용 문항 일부¹⁰⁾를 정규문항으로 전환하여 기업 답변을 최종 평가 결과에 반영함
- (평가 취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공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업의 에너지 전환 역량과 기후·공급망 리스크관리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관련 정보 공시를 확인하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함

3. 평가결과 분석

- 분석 개요
 - (분석 대상 및 방법론) 한국ESG기준원의 2025년 환경평가 대상기업 1,023사가 대외 공개 채널¹¹⁾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를 확인함

6)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Energy Storage System)

7)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8) 정규문항으로 도입 전 기업의 대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답변을 수집하되, 최종 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는 문항

9)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34년 산업계 재생에너지 사용목표 26%(6.2백만 TOE)

10) 최근 3개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공개 문항을 정규문항으로 전환했으며, 그 외 문항도 향후 전환 예정임

11)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 및 기업 홈페이지

- (분석 항목) 시장별, 자산규모별, 업종별¹²⁾로 △최근 3개년(2022~2024)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공개 여부, △최근 2개년(2023, 2024)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조달 수단, △이니셔티브(RE100, K-RE100¹³⁾) 가입 여부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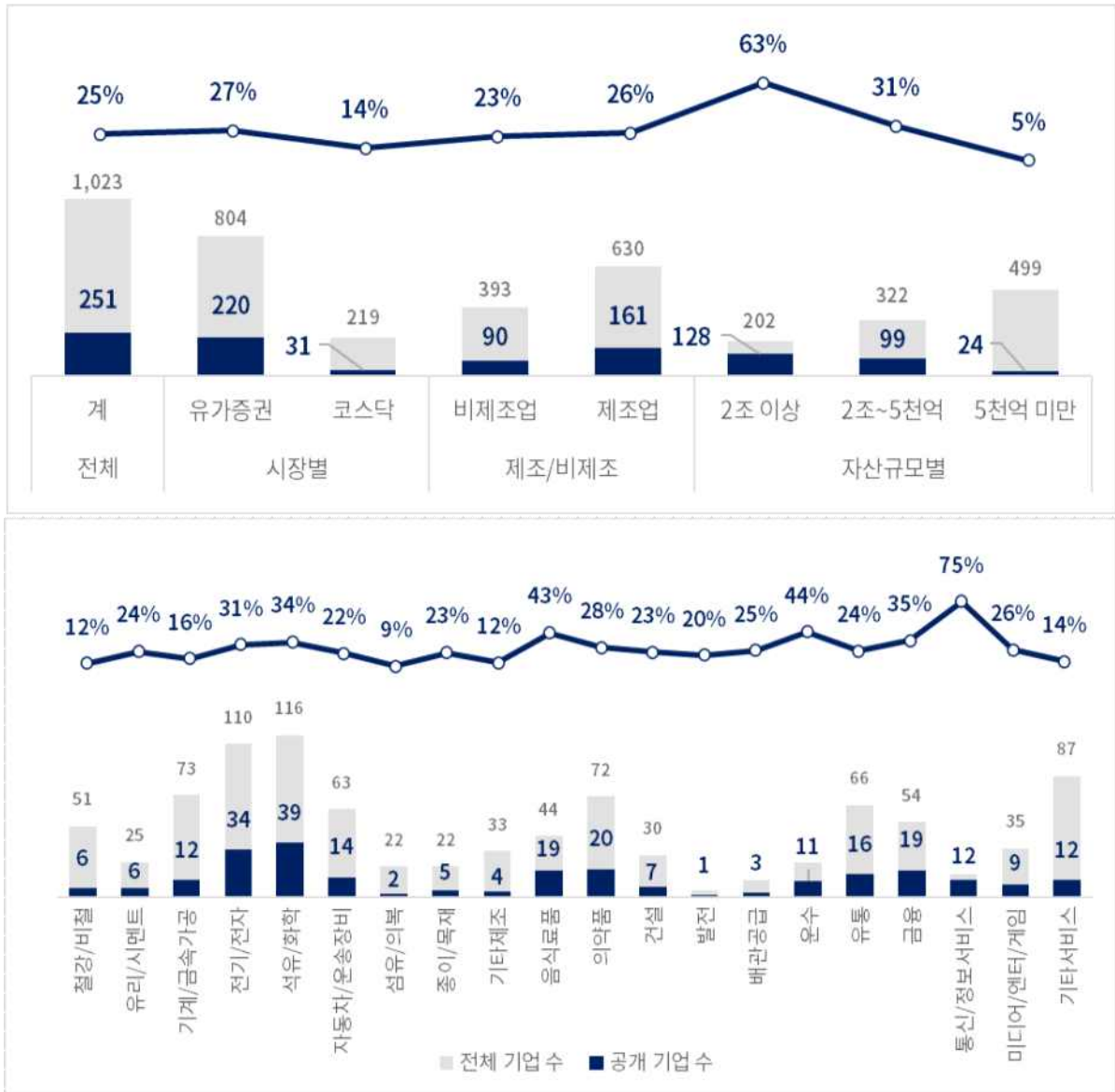
□ 분석 결과

- (사용량 공개 현황) 최근 3개년(2022~2024)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대외 공개한 기업은 전체 평가대상 기업의 25%(251사/1,023사)에 해당함
 - (시장별) 유가증권 상장사의 사용량 공개율은 27%, 코스닥 상장사의 사용량 공개율은 14%로 유가증권 상장사의 공개율이 더 높음
 - (제조업/비제조업) 제조업의 사용량 공개율은 26%, 비제조업의 사용량 공개율은 23%로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자산규모별) 총자산액 2조 이상인 기업의 공개율은 63%, 5천억 이상 2조 미만 기업의 공개율은 31%, 5천억 미만 기업은 5%의 공개율을 보임
 - (업종별) 공개율 상위 업종은 통신/정보서비스(75%), 운수(44%), 음식료품(43%)이었으며 하위 업종은 섬유/의복(9%), 철강/비철(12%), 기타제조(12%)로 확인됨
 - 이와 같은 결과는 데이터 수집 및 산정 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환경정보 공개가 활발한 한편, 중소 규모 상장사는 사용량 산정 및 보고 역량이 아직 미흡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12) 한국ESG기준원 환경평가 업종 분류체계(FnGuide의 WCS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환경 민감도에 따라 재분류)

13) K-RE100, 한국형 RE100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한 사용 확인서 발급

<그림 1. 최근 3개년(2022~2024) 분류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공개 기업 수 및 공개율(>



- (사용량 실적 개선) 국내 상장사의 최근 2개년(2023~2024) 신·재생에너지 총사용량¹⁴⁾은 2023년 137,032TJ, 2024년 166,584TJ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며, 총에너지 사용량¹⁵⁾ 대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2023년 4.8%, 2024년 5.7%로 0.9%p 상승함
- (시장별) 유가증권 상장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023년 대비 2024년 22%, 코스닥 상장사는 29% 증가하여 전반적인 시장의 사용량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총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유가증권 상장사는 2023년 대비 2024년 0.9%p, 코스닥 상장사는 0.2%p 상승함

14) 원칙은 기업이 공개한 국내, 별도 회계기준의 실적만 집계(단, 해외 또는 연결 회계기준 실적만 공개 시 예외 반영)

15) 기업이 한 해 동안 사용한 총에너지 사용량을 재생에너지 사용량과 비재생에너지 사용량의 합계로 정의하였으며, 해외 사용 실적을 공개한 기업은 국내 사용량과 해외 사용량을 합산함

- (제조업/비제조업) 2023년 대비 2024년 제조업의 사용량은 21%, 비제조업의 사용량은 27%로 비제조업의 증가가 더 컸으나, 총에너지 사용량 대비 비중은 제조업이 1.2%p, 비제조업은 0.2%p로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함
- (자산규모별) 총자산 2조 이상 기업의 사용량은 23% 증가하고, 5천억 이상 2조 미만 기업은 7% 증가한 한편, 5천억 미만 기업은 -27%의 감소세를 보임. 총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조 이상 및 5천억 이상 2조 미만 기업은 1.0%p, 0.3%p 상승했지만 5천억 미만 기업은 -0.5%p로 하락함
- (업종별) 2023년 대비 2024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상위 업종은 운수(406%), 철강/비철(193%), 하위 업종은 석유/화학(-36%), 발전(-7%)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상위 업종의 비약적인 증가세는 IMO(국제해사기구)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 해운·항공 배출량 규제 강화와 EU CBAM 시행에 따른 공급망 내 탈탄소 압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한편 총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2023년 대비 상승한 상위 업종은 섬유/의복(5.4%p), 전기/전자(5.1%p), 하위 업종은 종이/목재(-0.8%p), 기타제조(-0.7%p)로, 이는 해외 생산 거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글로벌 공급망의 친환경 전환 요구가 강하고, 제조 공정의 전력 소비가 높은 업종일수록 재생에너지 전환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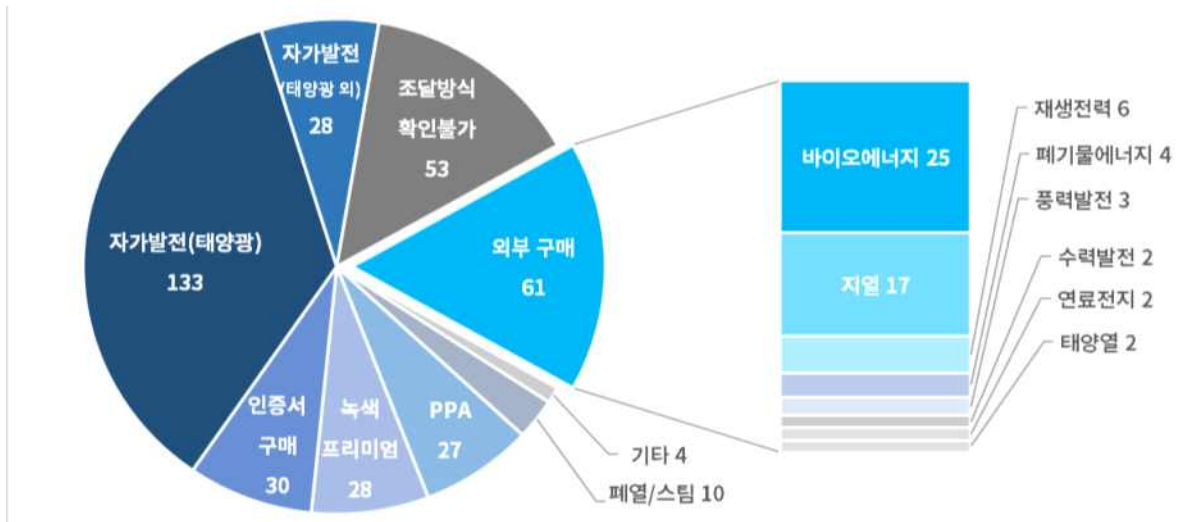
<표 1. 최근 2개년(2023, 2024)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실적(TJ), 총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대분류	중분류	재생에너지 사용량(TJ)			총에너지 대비 사용량(%)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전체	계	137,032	166,584	22%	4.8%	5.7%	0.9%p	
시장	유가증권	136,682	166,132	22%	4.8%	5.8%	0.9%p	
	코스닥	350	452	29%	0.7%	0.9%	0.2%p	
제조/비제조	비제조업	6,838	8,696	27%	1.0%	1.2%	0.2%p	
	제조업	130,194	157,888	21%	6.0%	7.2%	1.2%p	
자산 규모	2조 이상	123,613	152,352	23%	4.7%	5.7%	1.0%p	
	2조 ~ 5천억	12,889	13,846	7%	5.5%	5.8%	0.3%p	
	5천억 미만	531	387	-27%	4.0%	3.4%	-0.5%p	
업종별	제조업	철강/비철	39	115	193%	0.0%	0.0%	0.0%p
		유리/시멘트	575	818	42%	0.7%	1.0%	0.3%p
		기계/금속가공	862	1,275	48%	9.7%	14.0%	4.3%p
		전기/전자	90,625	118,458	31%	19.2%	24.3%	5.1%p
		석유/화학	14,175	9,133	-36%	1.5%	1.0%	-0.5%p
		자동차/운송장비	2,486	3,580	44%	3.0%	4.2%	1.2%p
		섬유/의복	139	168	21%	43.1%	48.5%	5.4%p
		종이/목재	10,891	10,784	-1%	30.2%	29.4%	-0.8%p
		기타제조	474	453	-4%	15.3%	14.6%	-0.7%p
		음식료품	9,132	12,103	33%	8.7%	12.2%	3.5%p
	의약품	796	1,001	26%	6.6%	8.0%	1.3%p	
	비제조업	건설	721	945	31%	6.5%	8.5%	2.0%p
		발전	2	2	-7%	0.0%	0.0%	0.0%p
		배관공급	134	197	48%	1.0%	1.7%	0.7%p
		운수	35	178	406%	0.0%	0.0%	0.0%p
		유통	182	336	85%	0.5%	0.9%	0.4%p
		금융	655	814	24%	5.1%	6.4%	1.3%p
		통신/정보서비스	5,025	6,113	22%	5.5%	6.6%	1.0%p
		미디어/엔터/게임	22	40	76%	0.9%	1.7%	0.7%p
기타서비스		61	72	17%	1.6%	1.9%	0.3%p	

- (신·재생에너지 조달 수단¹⁶⁾) 기업이 공개한 주요 조달 수단은 자가발전분 소비(43%), 외부 구매(16%), 인증서(REC) 구매(8%), 녹색프리미엄(7%), PPA(7%) 순으로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국내 조달 시장에서 소규모 분산형(태양광 자가발전)의 접근성이 가장 높고, PPA 및 인증서 거래는 아직 제도적, 경제적 제약이 크며, 녹색프리미엄은 그린워싱 우려로 활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됨

16) 한 기업이 여러 조달 수단을 사용한다고 공개할 경우, 각 수단별 실적으로 중복 집계함

<그림 2 신·재생에너지 조달 수단별 공개 기업 수(사)>



-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17)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주요 이니셔티브는 Δ RE100, Δ K-RE100(한국형 RE100)의 두 종류가 있으며, 최근 2개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공개 기업(251사) 중 2024년에 해당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를 공개한 기업은 RE100은 12%, K-RE100은 23%로 나타남
 - 2024년 RE100 가입 기업의 총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14.8%로, 미가입 기업 대비 5배 이상의 전환율을 보이는데, 이는 해외 생산거점 중심 재생전력 구매 및 장기 PPA 계약의 적극 추진 결과로 분석됨
 - 반면, 2024년 K-RE100 가입 기업의 사용 비율은 4.0%로 미가입 기업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재생전력 공급의 한계, 인증서(REC) 제도의 제약과 함께 가입한 기업 다수가 중소기업인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2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에 따른 최근 2개년 재생에너지 사용량 실적(TJ), 전년 대비 사용량 증감률(%)>

대분류	중분류	기업(수)	재생에너지 사용량(TJ)			총에너지 대비 사용량(%)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RE100	가입	30	89,803	101,424	13%	13.4%	14.8%	1.4%p
	미가입	221	47,229	65,160	38%	2.1%	2.9%	0.8%p
K-RE100	가입	57	12,829	14,010	9%	3.7%	4.0%	0.3%p
	미가입	194	124,203	152,574	23%	4.9%	5.9%	1.0%p

17) RE100과 K-RE100에 모두 가입된 기업은 총 15사로 각각 별개의 실적으로 집계함

4. 총평 및 시사점

- 국내 상장사¹⁸⁾의 최근 3개년(2022~2024)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25%이며 자산규모가 크고 전력 사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일수록 신·재생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비율이 높음
- 국내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지 않은 이유는 시장의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특히 자가발전분 소비를 위해서 설비투자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므로 규모가 큰 기업이 분포된 유가증권 시장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 및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음
-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산업군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조달 수단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18) 한국ESG 기준원 2025년 환경평가 대상기업

1. 사회평가 내 안전보건 평가 현황

□ 사회평가 개요

- 사회평가는 안전, 인권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책임경영 이슈를 중심으로 총 9개 대분류 및 25개 중분류로 구성
 - * 대분류 항목 : 리더십과 거버넌스, 노동관행, 직장 내 안전보건, 인권, 공정운영, 지속가능한 소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이해관계자 소통

□ 사회평가 내 안전보건 평가

- 안전보건 활동은 사회평가 대분류 중 ‘직장 내 안전보건’에서 평가, 크게 ‘안전보건 거버넌스’, ‘안전보건 위험관리’ 영역으로 구성
- 안전보건 평가 모형은 IFRS 등 비재무 정보 공시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 45001, KOSHA-MS 등), 주요 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등을 기반으로 하며 안전보건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구축 수준, 안전보건 관련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표 1. 사회평가 내 안전보건 평가 현황>

대분류	중분류	주요 평가 내용
직장 내 안전보건	- 안전보건 거버넌스 - 안전보건 위험 관리	안전보건 거버넌스(정책, 목표 등) 구축 수준 안전보건 위험관리 구축 및 운영 현황 안전보건 관련 정량적·정성적 성과 등

2. 안전보건 이슈의 중요성

- 최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상장회사에 대한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 등 안전보건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에 대한 중요성 증가
- 이러한 변화 속에 안전보건경영은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

3. 2025년 안전보건 평가 결과

□ 분석 개요

- 2025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이슈 관리 현황 및 안전보건 사고의 특징 분석

<주요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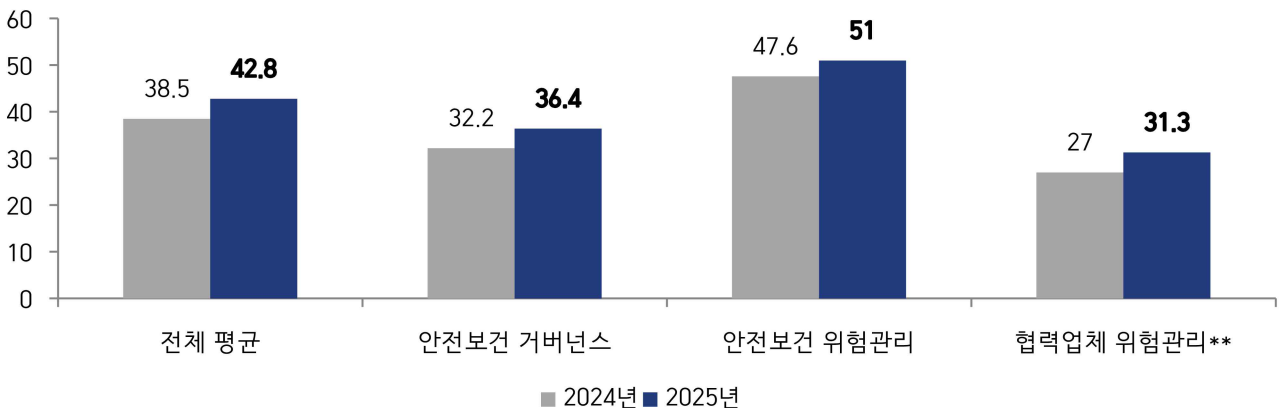
- ① **협력업체 안전관리 개선 노력 미흡**
: 전반적 관리 수준 개선 속에서도 협력업체 위험관리 영역은 상대적 미흡
- ② **안전사고의 반복적 발생**
: 동일 기업에서 연속적인 안전사고 발생 경향 확인
- ③ **특정 산업에 집중된 안전사고 발생**
: 근로자 안전사고 고위험 산업에 집중된 안전사고 발생 경향 확인

□ 분석 ①: 협력업체 안전관리 개선 노력 미흡

- 안전보건 분야 평가 결과, 안전보건 관리 수준의 전반적 개선 확인. 특히 산업재해 관련 정량 실적 등 정보 공개 확대와 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최고경영진 차원의 책임 강화가 점수 상승을 견인
- 한편 안전보건 위험관리 세부 영역 중 협력업체 위험관리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득점률을 보여 향후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표 2. 전년 대비 안전보건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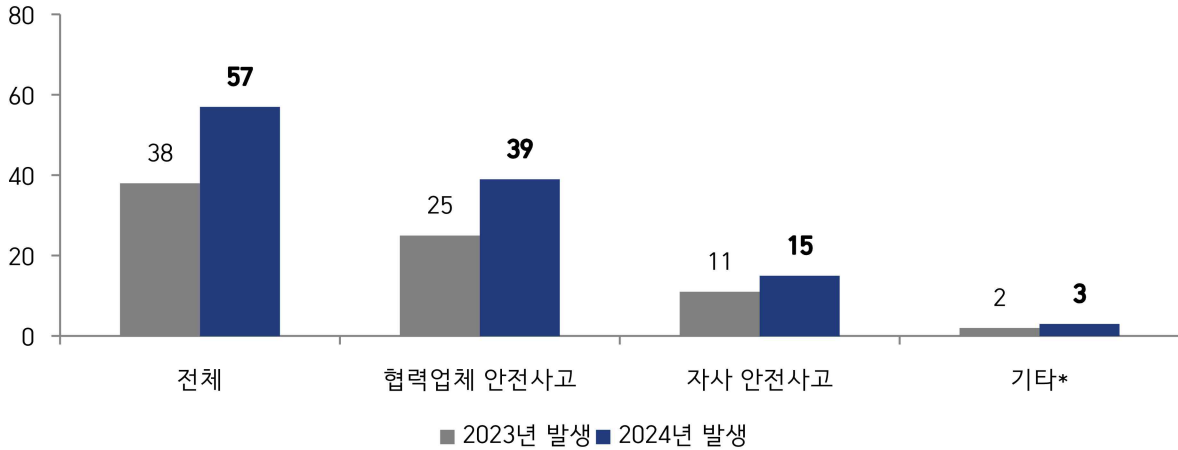
* 평가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출
** 안전보건 위험관리의 세부 영역으로 평가



-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의 상대적 취약성은 평가대상연도에 발생한 근로자 안전사고 현황에서도 동일
- 평가 결과, 평가대상연도인 2024년 발생한 전체 안전사고 중 65.8%가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사고(39건/총 57건)에 해당하였으며, 발생 건수 또한 2023년 대비 56% 증가

<표 3. 전년 대비 근로자 안전사고 현황>

※ 언론보도 등 대외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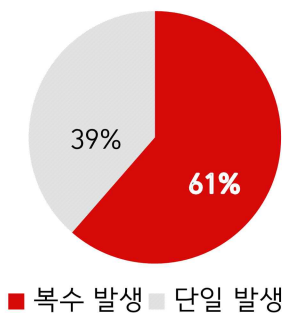


* 기타 : 자사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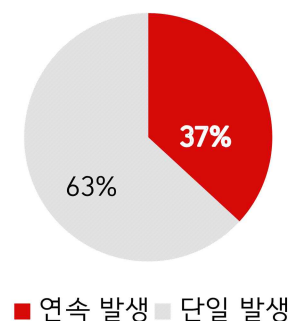
□ 분석 ②: 안전사고의 반복적 발생

- 평가 결과, 근로자 안전사고 중 동일 기업에서 한 해 동안 복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61.4%로(35건/총 57건) 다수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임을 확인
- 나아가 36.8%(21건/총 57건)는 2개년(2023~2024) 연속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

<표 3. 당해연도 복수 사고의 발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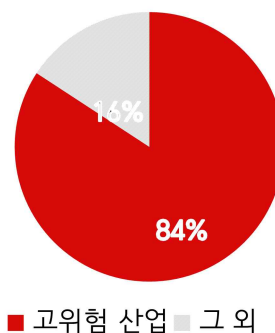
<표 4. 2개년도 연속 사고 발생 비중>



□ 분석 ③: 특정 산업에 집중된 사고 발생

- 업종별로는 자본재, 소재, 자동차와 부품 업종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84.2%(48건/총 57건)로 높은 비율 차지
- 이는 위 업종이 건설업, 화학물질 제조업,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근로자 안전사고 고위험 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이러한 산업의 경우 외주, 도급 형태의 작업 비중이 높아 작업 현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철저한 안전관리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산업에 해당

<표 5. 근로자 안전사고 고위험 산업의 사고 발생 비중>



4. 총평 및 시사점

- 산업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은 향상하였으나 여전히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
- 특히, 근로자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서 발생하였으며, 외주, 도급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 확인
- 이러한 결과는 고위험 작업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실질적인 위험이 협력업체에 전가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
- 이에 따라 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안전보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반복적인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및 위험관리 체계 수립 필요

1. 주주환원 관련 평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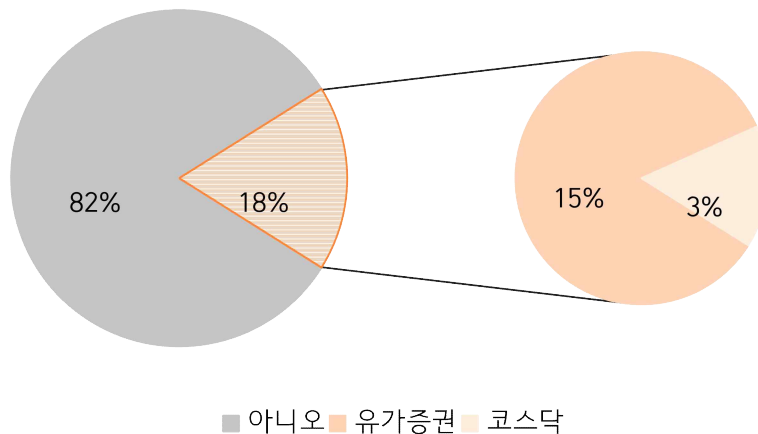
- 2025년 지배구조 평가 모형은 기업가치제고 정책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개정
- 기존 평가모형에 포함된 배당 적정성, 배당금 수준 관련 평가 등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실질적 주주환원 활동을 평가 요소로 확대한 것이 주요 특징
 - 주주환원 관련 비중 전년 대비 약 3%p 확대
 - 자기주식 보유 관련 리스크 반영
- 기업의 주주환원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체계 재정립

2. 주주환원 관련 평가 결과 분석

(1) 결산배당 확정 절차 개선

- (개요) 배당 관행 개선 정책¹⁹⁾을 반영, 확정된 배당액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
- (현황) 970사 중 약 173사(유가증권: 146사, 코스닥: 27사)가 개선된 배당 절차를 도입 및 실시한 것으로 확인

<차트 1. 배당절차 개선 -선배당액 확정, 후배당기준일 지정- 기업 비율(%)>



19) 금융위원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2023.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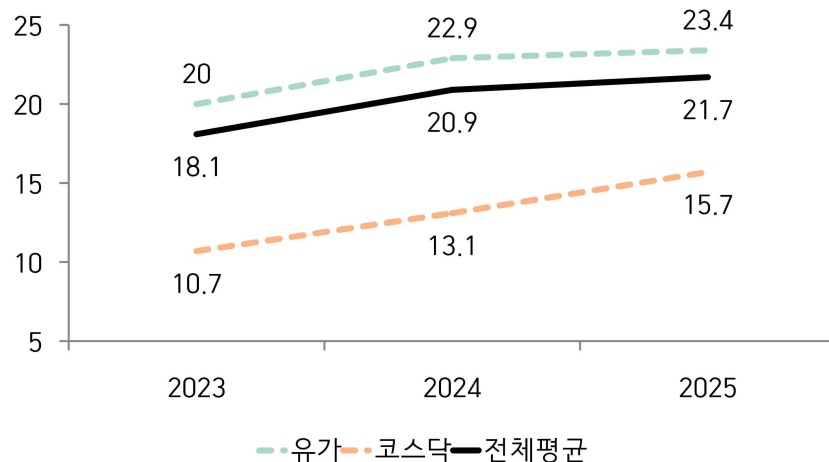
- (시사점) 전년 대비²⁰⁾ 약 12.5% 많은 기업이 절차를 개선한 점으로 볼 때, 배당절차 개선 정책이 기업 실무에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2) 배당정책 수립 및 이행 여부 공개

①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 여부

- (개요) 배당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표와 목표 설정을 포함한 3년 이상의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현황)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²¹⁾가 확산됨에 따라, 중장기 배당 정책을 공개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로, 963사 중 209사(유가증권:176사 코스닥:33사)가 중장기 배당정책을 공개²²⁾

<차트 2. 중장기 배당정책 공개 기업 비율(%)>



② 배당 정책 이행 여부

- (개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당정책을 구체적이고 달성가능한 목표로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공개하여, 배당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현황)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기업 209사 중 실제 이행 여부를 공개한 기업은 62사(약 29.7%)
- (시사점) 배당정책을 수립 및 공개하는 기업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주주가 정책의 이행 여부를 직접 측정하기 어렵고, 상당수의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20) 시범적용문항으로 가평가 실시

21) 금융위원회,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안)」 (2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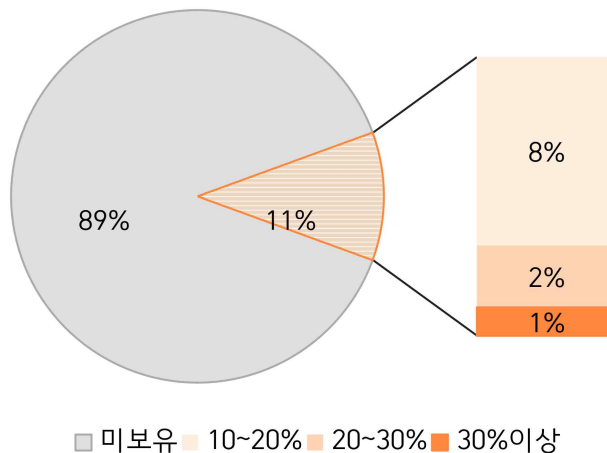
22) 2024년 940사 중 196사, 2023년 932사 중 169사

그치는 상황. 배당정책을 공개한 이후에는 이행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고, 미이행 시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

(3) 자기주식 보유 비율

- (개요) 자기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매입 후 소각하지 않으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의 악용 등 주주권 침해 가능성 발생
- (현황) 최근 3년간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970사 중 108사(10~20% 보유 기업 73사, 20~30% 보유 기업 24사, 30% 이상 보유 기업은 11사)이며, 보유한 자기주식 중 일부라도 소각을 실행한 기업은 그 중 18사에 불과

<차트 3. 최근 3년간 자기주식 보유 비율별 기업 비율(%)>



- (시사점) 자기주식 공시 관련 법률 개정안²³⁾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²⁴⁾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향후 제도 시행에 대비해 자기주식 보유 목적 및 활용 계획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공시 체계를 정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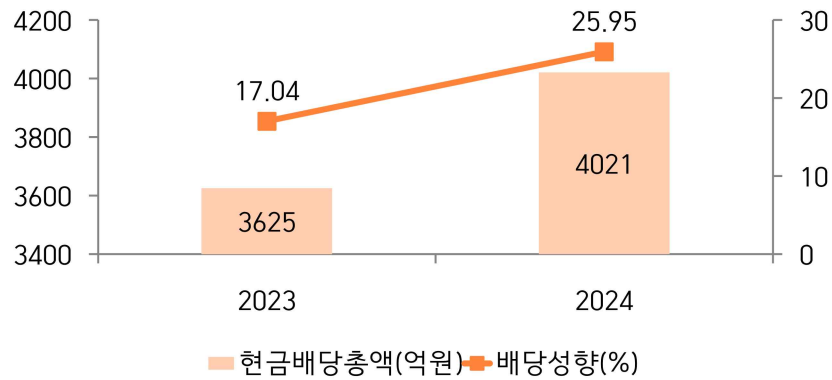
(4) 배당 실적

- (개요) 배당 실적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이행 수준과 일관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
- (현황①: 배당 규모) 상장기업 전반 현금배당 규모 확대
 - 현금배당총액은 2023년 약 43.6조에서 2024년 48.3조로 약 16%p 증가

23) 금융위원회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025.09.25)

24)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차트 4. 상장기업 현금배당총액 및 배당성향 평균값 변화 추이(24-25) >



- (현황②: 중간·분기배당 실시 여부) 중간·분기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83사로, 전년 대비 0.6%p 증가 (2023년 940사 중 75사)
 - 중간·분기배당은 기업의 현금흐름 안정성과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국내 기업의 배당 관행 개선을 위해 활성화 필요
- (시사점) 기업의 절대 배당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 배당세제 개편 논의가 병행됨에 따라 배당 확대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3. 총평 및 시사점

-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달성과 맞물려, 투자자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시장도 주주친화적인 방향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
- 향후에도 주주환원 평가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취지와 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

1.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

□ 지배구조 관련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 평가의 의의

- 금융사는 비금융사와는 달리 주로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의 자본(금융사 채무제표상 부채)을 위임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비금융사보다 더 엄격한 규제 적용과 준법 의무 이행 필요
- 금융사가 규제 준수와 준법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여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가치에 상당한 훼손을 야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에서 이를 관리·감독 중
- 한편, 우리 원 평가에서는 이러한 지배구조 관련 중대 규제 및 준법 리스크를 금융사의 내부통제체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

* 예시) 금융감독원 중징계, 횡령·배임 발생, 지배주주·경영진 사익추구

□ 분석 개요

- 최근 3개년(2023~2025) 금융사의 지배구조 관련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 발생 현황, 업권별 분석, 평가 결과 잠재적 영향 등 분석

<주요 분석 결과>

①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 발생 현황

: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전 업권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

② 업권별 분석

: 금융업권 중 특히 은행 및 금융투자업에서 빈발 경향

③ 평가 결과 잠재적 영향

: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 미발생시 지배구조 우수기업 비중 증가 예상

□ 분석 ① :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 발생 현황

-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는 모든 업권²⁵⁾에서 최근 3개년(2023~2025) 연속 발생
-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는 주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 이는 라인펀드 사태·채권 돌려막기 등 다수 금융사가 내부통제 부실로 연루된 사건이 드러난 연도의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에서 유추 가능

<표 1.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 발생 비율>

연도	업종 전체	금융지주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
2025	24.2%	10.0%	76.5%	6.7%	37.5%	3.2%
2024	13.4%	20.0%	35.3%	3.3%	12.9%	9.7%
2023	19.7%	30.0%	47.1%	13.3%	22.6%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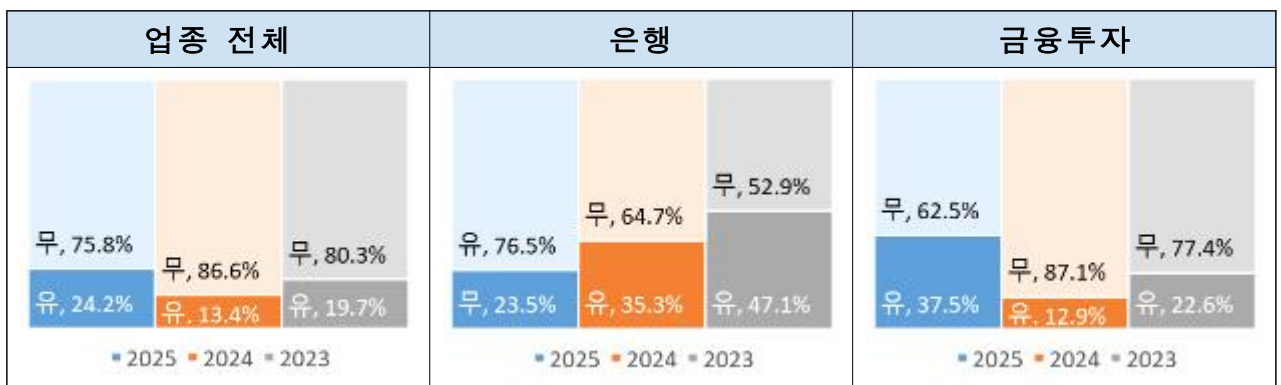
*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 발생 비율 = 발생기업 수 ÷ 평가대상기업 수

□ 분석 ② : 업권별 분석

- 은행과 금융투자업에서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 발생이 상대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양상 확인. 이는 횡령 또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형 금융 스캔들에 따른 결과로 분석 가능

* 예시) 2025년 : 업종 전체 24.2%, 금융투자 37.5%
 2024년 : 업종 전체 13.4%, 은행 35.3%
 2023년 : 업종 전체 19.7%, 은행 47.1%, 금융투자 22.6%

<그림 1. 은행 및 금융투자 업권 트리맵 차트 분석>



* 무 :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 발생하지 않은 기업 / 유 :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 발생한 기업

25) 업권 구분 : 금융지주,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

□ 분석 ③ : 평가 결과 잠재적 영향

-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비교적 우수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제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²⁶⁾로 평가되는 기업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약 7.57점의 잠재적 점수 상향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를 잘 관리하였을 때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표 2.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 미발생시 잠재적 점수 상향 여력>

연도	업종 전체	금융지주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
2025	<u>7.57</u>	1.89	7.73	2.7	9.01	3.51
2024	4.08	2.5	4.56	5.79	4.93	2.46
2023	6.24	6.75	8.49	3.82	5.53	1.32

2. 총평 및 시사점

- 최근 3년간(2023~2025년) 금융업 전반에서 지배구조 관련 중대 규제·준법 리스크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내부통제 부실의 구조적 문제로 분석. 특히 은행과 금융투자업에서 빈발하며, 자금 운용 및 상품판매 과정의 통제 미흡이 주요 원인
- 한편, 중대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ESG 평가 점수 상승 여력이 확인되어, 리스크 관리 강화가 지배구조 평가 및 기업가치 제고에 직접적인 순영향 존재

26)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방법론 상 A등급(우수) 기준